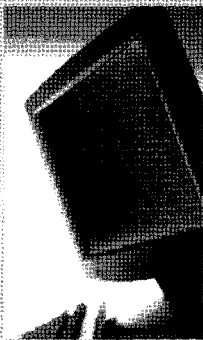




경영가이드 www.kcca.or.kr



- 보금자리공정도 필요하다
- 풀뿌리 경제 돈 맥(脈)을 살리는 금융시스템
-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딜레마
- 더블-딤 극복과 기업가 정신
- 고용위기 해결의 열쇠 '중소기업'
- 경제위기 1년을 돌아보며

보금자리공장도 필요하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보금자리주택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분양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서민 주택지원 정책으로 최장 20년간 전세를 보장하는 임대주택은 물론 근린 시세의 70%이내에 분양하는 중소형 주택도 매우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인 보금자리 주택을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온 서민주택정책이 형식적인 지원에 그쳐 교통이 불편한 미분양 아파트를 전환해 사용하거나 환경이 열악한 외곽지역에 짓는 아파트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외면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매우 새로운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현장과 고객 지향의 서비스 행정이 경영마인드와 결합해 실질적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교통과 환경 경쟁력이 있는 지역에 매우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장기임대주택보다도 더욱 그 가치가 돋보인다고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이같은 보금자리 주택의 열기에 힘입어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을 위한 보금자리 공장도 추진하라는 것이다. 물론 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교통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곳에 최소규모의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의 자금지원만으로도 충분할 지도 모른다.

• 기존 산업단지 새롭게 재편

그러나 정부의 아파트형 공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중심의 영세 중소기업들보다는 벤처형 소프트웨어산업을 위주로 구성되다보니 실질적인 전통산업의 영세업자들에게는 입주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영세 제조업체들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기업들이 지가부담을 이기지 못해 그 비싼 땅을 깔고 앉아 사업을 하느니 땅을 팔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기업을 농촌으로 옮기거나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가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옮기지만 수요처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영세업자가 비싼 물류부담을 물어가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오 큰 임대료를 부담하지 못해 폐업한 공장들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많은 산업단지들이 흉물스런 단지로 전락해가고 있다. 산업단지가 비싼 땅 값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 영세中企에 공장 제공해야

포장뿐인 장기임대주택을 대체해 실질적인 서민의 부담을 덜어준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영세중소제조업체를 위한 보금자리 공장을 제시하는 것도 이같은 죽어가는 산업단지를 살리고 영세업자들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장기적으로 보호하자는 취지라 할 것이다. 오죽하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은 제로에 가까운 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 그나마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겠는가? 기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은 이같은 고정비용으로서의 지나친 지가부담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도자유구역을 포함하여 정부는 알짜배기라고 생각되는 땅이면 외국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심지어는 외국기업들에게 사농기만해도

돈을 번다는 식으로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용지를 강조하는 경우까지 있다하니 기업들이 지가를 노리고 투자하라는 말은 아닐진대 분명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잘못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외국기업에게는 저렴한 용지 '분양' 보다는 안정된 장기간의 저렴한 '임대' 가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외국 CEO들의 입장에서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물며 인건비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영세제조업자들에게 높은 지가부담을 떨어주기 위한 묘책이 하루속히 나와야하지 않겠는가?

서민을 살리는 보금자리 주택과 같이 영세 제조업체들을 위해 죽어가고 있는 산업단지들을 새롭게 재편하는 보금자리 공장에 대해 보다 진지한 검토가 있기를 희망해본다. 접근성이 뛰어난 기존의 산업단지들도 살리고, 높은 지가로 인해 폐업으로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는 보금자리 공장이어말로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한국의 중소기업체들에게 새로운 부활의 아침을 약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용록 | 인하대 교수 · 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
제 1752호 2009년 09월 16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플뿌리 경제 돈 맥(脈)을 살리는 금융시스템

여전히 경기회복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각 경제 주체들은 작년말의 위기의식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듯하다. 잠복된 위험요소에 대해 경계를 놓아버리는 우를 범하면 되지 않겠지만,

기대대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 부문의 자금조달 사정은 여전히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정부와 통화당국은 지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실물 경제에는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유동성의 경제 기여도라고 할 수 있는 통화유통속도는 2007년말 0.8 수준에서 올해 1분기에 0.68 수준으로 추락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통화유통속도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광의 통화(M2)로 나눈 것으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지,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얼마나 잘 유통되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 때문에 경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가계는 자금조달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 은행 신용창조 가능 하락

또한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인 통화승수도 여전히 하락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는 금융권의 단기 신용창조 기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화승수 추이로서 본원통화에 비해 협의통화(M1)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표에서 단기유동성 통화승수가 2005년 8.5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5.88 수준으로 떨어져 2009년 상반기는 5.57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중에 풀린 돈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되는 신용창출 효과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 제공을 꺼리고 있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기업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은이나 정부가 풀 막대한 유동성이 풀뿌리 경제로 흘러들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금순환동향의 작년 2/4분기 이후 기업의 간접자금조달과 개인의 자본조달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은 2008년 2/4분기 36.1조원 수준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올해 2/4분기에 6.3조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도 또한 2008년 2/4분기 22.8조원 수준에서 하락해 올해 1/4분기 0.7조원에서 2/4분기에 반등해 14.8조원 수준을 나타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및 개인들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 금융 모니터링 강화해야

위에서 살펴본 금융시장 지표를 종합해보면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실물부분에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은행은 경기가 과열될 때는 대출을 부추기고 침체될 때는 대출을 회수하는 경기순응적 대출 행태를 보여 왔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본질적으로 장기의 평균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은행업의 본질적 이익추구 지향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단기수익지향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경기순응성 확대 경향은 이전보다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중소기업의 부실화 및 생존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되어 투기 자본화되거나 부동산 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실물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해 중소기업 및 금융회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의 본질적 이익 추구 형태인 장

기 평균이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개혁 또한 정부의 몫이다.

신상철 |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
제 1753호 2009년09월23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의 딜레마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양보를 미덕으로 가르치는 세상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경쟁을 미덕으로 삼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신자유주의라는 사조가 있다. 신자유주의는 18~19세기 사이에 영국을 중심으로 성행했던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시장경제이론이 대공황 이후 주춤하다가 20세기 후기에 새로이 부활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고 불린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개방과 경쟁으로 대변되고 있으며, 우리는 IMF위기로 불리우는 1997년의 경제위기 이후 알게 모르게 신자유주의 사상에 심취돼 초등학교생들조차 학교친구들과의 협력보다는 경쟁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가속화돼온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물결속에서 고용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필수이고,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실업을 수반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많은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생산라인의 해외이전을 통해 고용문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현재 생계형 자영업자의 증가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물결에서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계속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업이라도 영위할 것이다.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한국형 신자유주의 모색

중소기업 및 중산층이라는 허리가 약한 우리경제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지금 우리는 주저하였듯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 신자유주의 추세로 가면 경제의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분배위주로 가면 글로벌경쟁에 뒤져 모든 국민이 빈곤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한국형 신자유주의 또는 경제발전모형이 어떤 형태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형 신자유주의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라야 한다. 아직 경제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글로벌 경쟁의 논리를 내세우며 경쟁력이 부족한 많은 기업들을 한계기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스포츠는 체급별로 싸우는데, 아쉽지만 경제는 체급별 싸움이 아니다. 글로벌경쟁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의 다국적기업에 비해 체급으로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해 주고 글로벌경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과거 정부의 보호 및 지원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 고용창출 中企 육성해야

그렇다고 과거 대기업처럼 전폭적인 지원을 바라자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하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들은 부품조달도 해외의 아웃소싱에 의존한다. 결국 이들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의 고용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이러니하게도 국내 고용창출의 잠재력은 조금 부족한 듯 보이는 중소기업들에게 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생계형자영업자들에게 정부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해 음식점을 비롯한 자영업도 대형화돼 작은 규모로는 살아남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소규모의 일시적인 처방은 생계형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들을 임금노동자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글로벌경쟁력이 없더라도 임금노동자를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몇 개의 대기업이 국내의 많은 노동력을 다 흡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도 이렇게 되기까지 과거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정남기 |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제 1754호 2009년09월30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더블-딥 극복과 기업가 정신

2009년도 경제성장률이 -1%로 전망되어 있고, 전년 1/4분기 및 2/4분기 대비 올해 성장률이 각각 -4.2%에서 -2.2%로 감소하여, 잘 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를 상회해 0%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기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희망을 주는 가 했더니, 한국은행이 10월 29일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지수의 결과는 희망이 아니라 더블-딥(W자형 경기회복) 논쟁을 불러올 것 같다.

제조업의 10월 실제치와 11월 이후 전망치가 하락하고 있고, 반면 비제조업의 10월 실제치는 6포인트 상승했지만 11월 전망치는 2포인트 상승에 거치고 있다. 제조업에서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0.5%), 불확실한 경제상황(17.3%)에 이어 환율요인(16.9%)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비제조업에서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25.1%),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경쟁심화(16.9%)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비제조업의 1, 2위 경영애로 공통요인은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이다. 이는 2009년 한국경제 및 세계경제의 불투명을 고려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요인이다. 정부가 -1% 또는 0% 경제성장을 기대할 때, 민간소비는 0% 내외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정부가 내수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적자재정을 통한 재정지출이 2009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추가로 투자할 재원도 바닥이 나 있다.

• 경제 불확실성 지속 전망

민간소비 및 정부지출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2009년의 내수부진 및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당장 해소될 가망성이 없다. 이러한 경제 전망이 기업경기 조사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수출 및 수입 지표를 보면, 기업인들의 그러한 체감 경기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다.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상품의 수출은 2009년 1~9월 동안 -20.7% 감소했지만, 상품의 수입은 -33.1%로 감소했다. 수출 보다 수입 감소가 훨씬 더 커서, 9개월 동안 경상수지는 322.2억 달러를 달성했다.

더구나 올해 9개월 동안 원자재, 자본재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39.2%, -22.6%로 감소했다. 동 기간 동안 수출용 수입과 내수용 수입은 각각 -34.9%, -31.8% 감소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 감소로 인한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라 할 수 있다.

자본재 수입이 감소해, 투자가 부진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면, 미래 잠재 성장도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영애로 요인으로 현재 내수부진도 문제이지만, 미래도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 세계시장 개척 나서야

미래 경영애로 요인도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 불황속에서도 해외 시장을 더 열심히 개척함으로써 해외 전문가들의 기대와 달리 놀라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등으로 수출은 회복되고 있고, 미국, EU, 중남미 등으로 수출 감소폭

은 줄어들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중소기업이 내수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불경기에는 인건비도 저렴해지고, 수출에 필요한 좋은 인력을 구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쉽다. 아니면 대기업의 유능한 퇴직 인력도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기업의 성장 역사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공통요인이 바로 불경기에 잘 준비해 호경기에 도약하는 것이다. 불경기는 중소기업들도 도전적인 일을 해 볼 수 있는 적기이다. 불경기로 움츠리고 있기보다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으로 판로를 확장해 보자.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원료, 새로운 공정,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가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때다.

이중욱 | 서울여대 교수
제 1759호 2009년11월11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고용위기 해결의 열쇠 '중소기업'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 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경제협력기구(OECD)의 11월 경제전망보고서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4.4%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OECD 30개국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로, 6월 전망치(3.5%)보다 0.9%포인트 상향 조정할 수치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정부의 전망치인 4%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

고, 한국개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 전망치를 1.3%포인트나 높여 5.5%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잠복된 상태로 성장의 모습을 확신하기는 쉽지 않지만,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불황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용 이야기로 넘어오면 여전히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는 충분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내년 고용시장 '별투명'

현재 우리나라 고용현황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만명 증가해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축소됐다. 10월 실업률은 3.2%, 고용률은 59.5%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0.2%포인트 상승하고, 고용률은 0.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건설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서비스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건설업 분야의 감소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서비스업의 증가는 희망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힘입은 효과라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50세 미만에서 감소했는데, 특히 우려되는 점은 청년층의 실업률 상승(0.9%포인트), 고용률 하락(1.2%포인트)이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대기 중인 취업준비생, 구직단념자, 쉬었음 수치가 2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장년층(15세~39세)이 일자리를 잃어 쉬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

년들에게 취업 경험과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 대응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OECD는 정부의 경기부양 패키지로 내년 15만개 내지 3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中企 안정돼야 고용창출

1929년 대공황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시기의 주요국 제조업 실업률 통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당시 주요국 실업률 최고치는 공황 발생 시점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실업률 최고치는 대공황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미국은 1933년, 영국·독일은 1932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당시 미국, 영국, 독일의 제조업 실업률은 각각 37.6%, 22.1%, 43.8%로 치솟았으며, 이후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산업생산은 1932년에 저점을 찍고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년이 소요되었다.

아마도 내년 경제의 가장 큰 위험은 '고용위기'가 될 것이다.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자리 시장의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OECD는 세계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수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산업생산이 개선된다고 해도 '고용없는 성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지속적으로 떨어진 반면,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증가했다. 일자리를 만드는 측면에서 산업의 중심축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근로자들이 장기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떨어지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질 높은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을 담보하는 원천인 중소기업의 분발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화를 통한 고용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기대한다.

신상철 |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
제 1762호 2009년12월02일 발행 중소기업뉴스

경제위기 1년을 돌아보며

작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표면화된 미국발 경제위기가 발발한지 1년이 좀 더 지났다. 경제위기는 당초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부실에서 발생하였으나 금융기관들이 복잡한 파생상품으로 연결돼 있어서 수 많은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졌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다시 실물부문의 부실로 파급되고 그래서 전세계가 경제위기를 경험한 것이다.

경제위기 초반에는 불황의 한파로 전세계 경제가 끝이 없는 심연으로 추락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가간 공조의 차원에서 위기극복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경제위기 1년이 지난 지금은 그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상태에 와 있으니 정말 다행이지 않을 수 없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시작됐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앞으로도 비교적 빈번히 일어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축적된 자본이 실물경제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자국은 물론 제3세계의 금융시장에서 수익극대화를 위한 위험상품에 투자를 지속하는 한 앞으로도 금융위기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위험한 금융상품에 투자에 더해 각 나라의 자본시장이 개방과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추세인 오늘날에는 한

국가의 금융위기는 금방 글로벌 금융위기, 나아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 은행 위기대처능력 부족

이러한 금융위기에 우리나라는 특히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거의 완전히 개방돼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즉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위기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지속성장 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다.

우리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었으나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그 대처방법은 지난 외환위기보다 발전된 대처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위기로 시중은행들이 유동성부족을 겪자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고, 외환부족에 대해서는 외환보유고를 털어 엄청난 규모의 외환을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공급했었다. 은행들은 지난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정부의 지원에 의존한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이 신용경색을 겪을 것을 예견하고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들 은행에 중소기업에의 적극적인 자금공급을 요청하였다.

• ‘은행안정기금’ 만들어야

그러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자금공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동성 지원을 받은 시중은행들이 자신들의 유동성부족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일부분의 원인이 돼 작년 말에 중소기업 도산 수는 보통 수준보다 1.5배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은 문자 그대로 단군 이래 최악의 경영불안을 겪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은행에 투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은 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은행은 이익이 날 때는 임직원의 임금을 과도하게 올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정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그 위기를 전가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행태가 계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은행 스스로 위기관리를 철저히 해 이익은 사유화, 부실은 공유화하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그 방안으로 은행 이익의 일정비율을 누진적으로 떼어내어 가칭 ‘은행안정기금’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은행들이 이익이 날 때 이 기금에 꾸준히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부족을 겪을 때 이 기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면 그 부족분에 한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공적자금을 투입 받고 그것을 완전히 상환하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어쨌든 더 이상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은행유동성이 부족하고 그것을 국민세금으로 막아주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경영불안에 떠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를 바란다.

송장준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 1764호 2009년12월16일 발행 중소기업뉴스